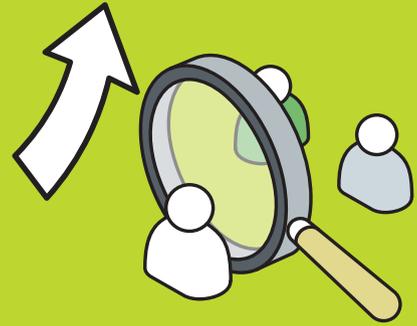


202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활력 저하 등 2026년에도 많은 숙제를 안고 시작한다. 여기에 AI 기술변화에 따른 여러 신산업이 등장하며 산업 전환기 노동문제 역시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5월 1일에는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절 복원을 계기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계획 중이다.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 일하는 노동자가 알아두면 좋을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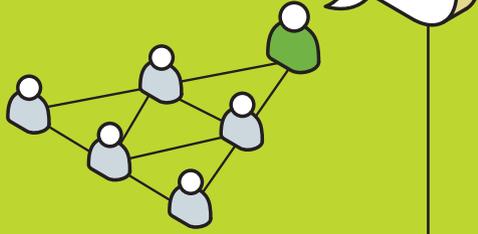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청년 취업 지원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중심이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제대 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를 설치해 대기업 등에 일 경험 프로그램(4.3만 명), AI 등 미래 역량 훈련(4.9만 명)을 제공한다. 기존 50만 원이던 구직촉진수당은 60만 원으로,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도 최대 720만 원까지 증액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 주도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창의성을 저해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가가 나선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와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324억 원) 실시를 통해 체계적·안정적 지원 근거가 될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업안전 현장 격차 축소

행정력이 닿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관계 부처 및 협력 단체와 함께 정책 길목(접점)을 확보하고, 감독관 증원과 일터지킴이(1천 명) 투입 등으로 기술·재정 지원과 연계한 감독에 집중한다.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재정 약 5,400억 원도 신속 연계한다. 중견·대형 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책임과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도 보장한다.



인구구조 대응 일자리 확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한다. 40대는 1:1 경력 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50대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1,000인 이상 → 500인 이상)한다.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세대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에게는 민간·공공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과 수준별 AI 맞춤형훈련을 신설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가 안심하며 일하는 사회

늘어나는 맞돌봄 확산에 대응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겪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월 120만 원→140만 원)과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60만 원)도 집행한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가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국가가 앞장선다.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그들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권리 행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시 노동자로 상대를 적용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법적 보호 영역을 확대한다. 또한, 노동법 적용 회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뿌리 뽑을 계획이다.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처럼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행위

새로운 산업재해 대응 강화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기존 228일이던 산재처리 기간도 160일로 단축해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및 재난 대응 노동자 등에 트라우마 치료와 고객응대노동자의 정신건강 장애 보호도 강화한다. 한랭질환 보호조치 강화와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도 확대(280억, +80억)하며 노사정이 구성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통해 한파·폭염을 비롯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재해에 공동 대응한다. 🗣️